전주시, '인권친화 도시' 지향

'사람이 사람답게'… 지속 가능 시스템 구축

전주시는 빈부의 격차, 나이와 성별, 이념과 종교에 상관없이 시민 모두가 평등하게 존중받는 '사람의 도시'를 지향해왔다.

이를 위해 민선6기 이후 제도적 기반을 마련, 지속가능한 인권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정책과 노력을 기울였다.

▲인권보장 시스템 제도화를 통한 인권사회 기틀마련

전주시는 지난 2015년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업무 전담팀을 신설해 체계를 정립, 인권신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시는 지난 2016년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수립해 인권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분야별 인권업무 조정 등 실효성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추진되는 동력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인권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실행을 위한 전주시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 △전주시 인권센터 추진방향 논의·결정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아카데미 운영과 체계적인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현안 모니터링 등으로 시민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시스템 구축 △인권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및 인권공동사업을 추진 인권행정을 구현해 왔다.

시는 시정 전반에 걸쳐 인권에 관련된 각종 사항을 심의하고 건의하는 등 시민 인권보호에 앞장서게 될 인권위원회도 인권단체의 추천 등을 통해 인권 현장에 정통한 활동가와 교수 등의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 이들은 전주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길잡이 역할과 함께,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시는 사회복지시설 등 점검 시 인권팀이 동행해 인권 침해요소 등을 점검하고, 구청 통합사례관리사 인권교육으로 복지수급대상자에 대한 인권 홍보활동가로 활용하는 등 인권현안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보호를 강화했다. 또, 시설거주자 등에 대한 인권침해사안 발생 시 강력한 행정처분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민선7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공약사업인 괴롭힘 제로화 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출연기관 민간위탁시설 등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터 괴롭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일터 괴롭힘 방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다. 또한 직제개편을 통해 인권담당관을 신설, 인권행정 구현을 강화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가 존중받는 인권친화 도시

지속가능한 인권사회를 제도화한 전주시는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어느 세대나 포용하는 따뜻한 복지 정책을 통해 인권친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민선6기 출범 후 첫 결재사업인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은 지방자치단체 대표 복지 정책으로 사람중심 정책의 한 획을 긋는 모범사업이다. 2014년 10월 183명의 아이들에게 배달된 아침은 각계 각층의 후원자들의 모금을 통해 현재 280명의 아동들에게 365일 따뜻한 도시락과 반찬, 간식과 생일케이크 등을 제공하고 있고 후원금도 7억6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마음이 함께 성장하는 지혜의 반찬' 사업을 통해 대상아동 1000명에게 분기별 개인 희망도서를 전달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와 생리 속옷을 지원하는 '딸에게 보내는 엄마의 마음' 사업을 전개, 단순히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것을 넘어 여학생들의 인권을 지켰다. 또, 폐지수거 어르신 3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용품 배포, 무료건강검진 실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희망 줍는 손수레' 사업도 추진중이다.

인권보장 · 증진 조례 제정 제도적 기틀 마련

엄마의 밥상 · 지혜의 반찬 등 '따뜻한 정책' 펼쳐

시는 또한 '청년쉼표 프로젝트'를 전개, 선정자에게는 전문 심리상담기관에서 실시하는 개인별 심리검사와 심층상담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쉼표 프로젝트 참가자에게는 3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돼 취업준비 및 구직활동 비용, 생활비로 고민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시가 추진해온 장기화된 취업준비로 인해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무료 청년건강검진 사업은 올해부터 정부정책으로 반영돼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나아가 전주 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정책으로 국민연금공단 등 5개 공공기관과 농협 전북은행 등에 900여명의 지역인재가 일자리를 찾았다.

이밖에 장애를 가진 시민들이 일자리, 이동권, 주거권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섬세하게 살피고 여성·다문화가정·영유아 등 어느 세대도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실현중이다.

이에 전국 최초 발달장애인 맞춤훈련통합센터를 개소하고,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에 착수했다. 뿐만 아니라 전북지역 최초로 발달장애인을 사서보조로 채용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형 카페도 늘려나갔다. 또한 버스정류장에 교통약자가 도착 시 운전자에게 교통약자의 대기정보를 알려주는 IT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개선, 인권을 일상 속에서 실현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미니취업박람회 개최, 결혼이주여성 대상 맞춤형 직업교육 실시 등을 통해 여성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고 있으며, 특히 어두운 성매매 집결지, 여성-인권-문화재생의 메카로 자리 잡은 선미촌 재생사업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인권회복 정책으로 손꼽히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인권은 시민의 생활 전반에서 이해되고 실현될 때 비로소 시민의 삶의 질을 바꿔놓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는 여성, 장애인, 아동, 노인, 이주민 등 인권 취약 계층을 위한 세밀한 인권보호망 강구, 미래지향적 가치로 인권을 확장하는데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완산구 정전사태 발생… 차도는 '아수라장'

24일 전주시 완산구 KT사거리 일원과 쑥고개로가 정전사태가 발생하자 신호등에 불이 꺼져있어 경찰 관계자들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차도가 아수라장이다.

"일본 정부, 부당 경제도발 즉각 철회하라"

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결의안 채택

전주시의회가 일본정부의 부당한 경제도발 행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4일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본의 첨단산업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와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려는 일련의 행위가 우리 정부를 모독하는 불법부당한 경제도발 행위라고 규정하고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철회를 요구하는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G20정상회의 선언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된다"며 "이는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또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기업들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 뒤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전국 시민들은 일본여행과 일본상품 구매를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박병술 의장은 "대한민국 정부를 모독하는 일본정부의 적반하장 격인 이번 조치를 절대 좌시해서는 안된다"며 "일본정부의 부당한 도발행위가 철회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뇌사 판정' 30대 남성

장기기증 통해 새 생명 선사

뇌사판정을 받은 30대 남성이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사하고 영면했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불의의 사고로 의식을 잃어 중환자실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22일 뇌사판정을 받은 양모(남성, 30대) 씨가 장기를 기증했다고 24일 밝혔다.

양모 씨의 가족은 평소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온 고인의 삶을 기리기 위해 장기기증을 결정했다.

유족은 "고인이 기증한 장기가 중환자들에게 큰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모 씨가 기증한 심장, 간장, 신장(2개)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선정한 4명의 환자에게 이식 수술이 이뤄졌다. /김영태 기자

전주형 마이스산업 육성 '집중'

시, 올 전담부서 신설… 산업 발전 세미나도 개최

전주시가 전주한옥마을을 찾아오는 개별 관광객을 소규모 학회와 컨벤션, 국제회의 유치 등으로 연결해서 전주형 마이스산업으로 키우기로 했다.

시는 올해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 컨벤션유치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문화시설, 전주지역 주요 호텔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주형 마이스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마이스산업은 회의(Meeting)와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용어로, 규모도 크고 1인당 소비도 일반 여행객보다 월등히 높아 관광 수익과 관광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마이스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컨벤션 유치를 위해 아시아 태평양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과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해 홍보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시는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기존의 문화관관산업에 전주만의 강점을 살린 마이스산업 발전방향을 함께 찾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전주시 문화관광산업을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해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남대학교, 수원컨벤션뷰로, 군산 GSCO 등 각 지역 컨벤션센터 관계자 등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마이스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마이스산업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먼저 정광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정부의 마이스산업 정책 및 전주시 마이스산업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정 박사는 전주시 마이스 발전을 위한 추진방향으로 △중소컨벤션도시로서 지역 기반산업을 토대로 한 국내·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정책 수립 △시설, 조직, 관련 조례 등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마련 △마이스 산업 관련 정책 제안 및 인식확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숙박업·여행사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을 제언했다.

발제에 이어 윤승현 한남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유세준 수원컨벤션뷰로 단장과 박찬준 군산 GSCO 센터장, 정정숙 광주관광컨벤션뷰로 컨벤션마케팅장, 김배호 한국관광공사 마이스기획팀장, 김남규 전주시의원, 정명희 전주시 정책연구원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도 펼쳐졌다.

시는 이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마이스 산업 관련 정책 등을 정비하고, 마이스 팸 투어와 국제행사 유치 활동을 통해 각종 마이스 관계자들을 만나 전주만의 차별화된 장점을 부각시키는 유치 활동에 주력해 나갈 예정이다.

황권주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주시 마이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 세미나가 전주만의 특화 방향이 설정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행사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일본뇌염 '경보' 발령

전주시보건소 예방접종 당부

전주시 보건소가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모기감시 결과 경남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하루 평균 1037마리(전체 모기의 71.2%)가 채집됨에 따라 지난 22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보건소는 일본뇌염 국가예방접종 대상자인 생후 12개월에서 만12세 이하 영·유아와 어린이들이 적기에 예방접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송효철 기자

"청소 · 경비원 근무환경 전수조사해야"

허옥희 시의원, 5분 발언서

전주에서도 대표적인 노인 일자리인 공동주택 경비원들이 고용불안과 저임금, 열악한 노동환경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4일 전주시의회 허옥희(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은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갖고 전주시가 공동주택 경비원들에게 휴게시설을 만들어주고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지난 4~5월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가 진행한 '경비·청소원 근로실태조사'를 근거로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열악한 여건을 지적했다.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주시 경비원의 80% 이상이 계약·임시직 형태로, 90% 이상이 '24시간 교대제(격일제)'로 근무하고 있다.

50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율도 44.5%에 달했다.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경비노동자의 임금은 월 150만~200만원 미만이 67.5%로 조사됐다.

허 의원은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노동환경이 취약하면서 당연히 근무환경이나 조건에 대한 만족도는 낮다"면서 "이중 휴게 환경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 의원은 "경비원 휴게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전주시에 요청한다"면서 "경비실과 분리된 별도의 휴게 공간인지, 실제 수면 등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가구나 시설 등이 갖춰져 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대낮에 주택 침입

음란행위 후 도주

대낮에 한 남성이 주택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4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주택에 한 남성이 침입해 음란행위를 하고 도주했다.

이 같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달아난 용의자를 뒤쫓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를 검거하는 대로 공연음란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다. /강석훈 기자

전북경찰청, 교통안전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용식)은 24일 지방청에서 교통안전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이정상 도로교통공단 전북본부장, 한상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장, 이호경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 박경민 전북운전면허시험장장이 참석했다.

전북경찰청은 노인, 어린이, 보행자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결과 7월 20일 기준 전라북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은 전국 평균인 10.8%보다 더 높은 15.6% 감소율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용식 청장은 "현재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영중인 장애인 운전지원센터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다." 며, "전북경찰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어르신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 안전을 위해 정성(精誠) 치안을 구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한편,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 사고예방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지부와 합동으로 법규위반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한국도로공사와 협업하여 고속도로 시설개선을 추진한 결과 도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은 전국 평균 27.1%보다 높은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